

### 3) 농촌진흥운동의 전개와 내용

농촌진흥운동은 일제시대 조선농업 발전의 제3단계 시기인, 농산물가격의 대폭락과 쉼레(schere)현상의 격화로 특징지워진 농업공황과 깊은 관련을 갖고 진전된 운동이다. 1930년대는 세계공황의 여파가 농민생활의 극단적 위기를 낳았으며, 1930년대 대풍작은 쌀가격의 대폭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조선의 중·소지주와 자작농의 몰락, 소작농의 이농 등 사회적 모순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조선의 농가 290여 만 호 가운데 약 8할인 230만 호가 소작, 자작 겸 소작계급에 속하는 소작농으로서 이들 농가의 대부분은 해마다 단경기에 식량이 부족하여 초근목피(草根木皮)로써 호구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부채액의 누증은 조선농민의 파멸과 몰락을 한층 더 가혹하게 하였다.

1926년에 현미가격이 석당 15.01원 수준에서 1931년에는 무려 56%나 하락하여 6.61원으로 대폭락하였다. 일반 물가지수는 1925년에 237.8(1910년 100)에서 1931년 147.5로 38%가 하락하여, 곡가의 폭락현상과 농산물가격의 하락이 일반물가의 하락현상보다 낮은 쉼레현상이 나타났다. 1930년 당시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전 농가 300만 호 가운데 차금(借金)을 갖고 있는 농가가 58%인 173만 호에 달하고 1호당 평균액이 65원, 최고액은 420원에 달했다. 조선 농민경제의 양상은 1930년대의 관제통계에도 전국 총농가의 절반 이상이 춘궁농가이며, 특히 소작농은 3분의 2 이상이 춘궁농가였다고 한다.<sup>1)</sup>

농업경영은 조선농가의 투하자본량이 일본농가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였으며, 농업 총수입은 일본농가 총수입의 2분의 1 이하였고, 수지 부족액은 무려 5배에 달하여 조선 농촌경제는 빈궁과 침체에 허덕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일제통치자들은 1932년부터 조선농민에 대한 구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2년에 경제갱생계획과 자작농창정계획(自作農創定計劃)을 수립하였다. 농촌진흥운동의 중점은 바로 1932년부터 실시된 자작농창정계획에 있었다.

농촌진흥운동의 제1기는 준비공작기로, 1932년에 조선총독부에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촌진흥운동의 중추기관화(中樞機關化)하고 많은 운동지침을 하달하는 시기이다. 자작농설정 실시요령에 따르면 자작농업자는 농촌의 중견인물로서 소질을 갖추어야 하고, 근로애호정신에 불타 있으며, 소작농업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작농가에 대한 자금대부 조건은 1호당 논 4단보, 밭 1단보를 표준으로 하여 금액은 평균 660원으로 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운동의 제2기는 전개시기로, 1933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경제갱생계획 시행의 근본적 취지는 물질에 편중하거나 형식에 흐르지 말고 정신의 진작, 농민의 자작·자발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계획의 목표는 부족식량의 충실을 기하여 춘궁을 없애고, 현금수지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채를 정리·상환하게 하여 그 중압에서 구출하게 한다는 소위, 갱생 3대목표를 전개하게 된다.

일본의 침략정책은 조선 없이는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운동은 조선민의 저항의 불길에 언제 휘말릴지 모르는 일제의 식민정책이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위한 심전개발(心田開發)에 주안을 두고 진행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진흥운동은 농본사상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농촌과 농민은 '건전한

1) 조선총독부, 『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參考事項摘要』, 1932, 61쪽.

국방의 역군'이며, 농본주의와 천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국가존폐의 관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촌진흥운동의 실적개요를 보면 주요 목표였던 식량확보 실적과 부채농가 퇴치실적에서 미미한 정도의 목표달성에 그치고 만다. 결국 농촌진흥운동은 농업공황에 대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운동이었으나, 1930년대 세계대공황으로 발생한 일본 자체의 문제를 조선으로 전가하면서 가장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개된 침략운동이었다.